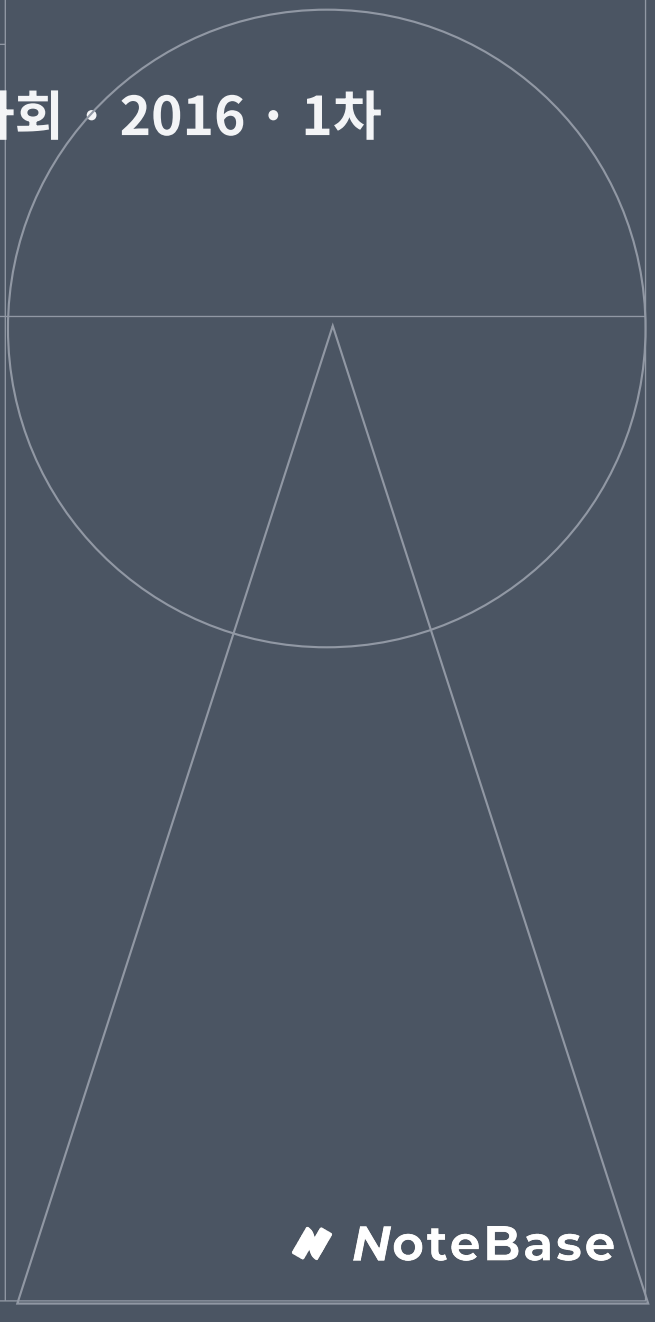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6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6 · 1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6 · 1차

문 1.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분이다. 이에 나타난 헌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한다.

①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②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된다.

③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

④ 권력 창출의 정당성을 국민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 전문과 제8조에 나타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권력을 구성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원리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의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을 구성·통제하는 헌법의 기본 질서이다.

핵심 구분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여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권력 분립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의사에서 찾는다. 현행 헌법 전문과 제8조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시하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개인의 자유를 근본 가치로 삼고 국가 권력의 자의적 간섭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핵심이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에 해당한다.

② O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거가 된다.

③ X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관점으로,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
틀린 표현: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
올바른 표현: 국가보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중시하며, 국가 권력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한된다.

④ O
민주주의에서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합의와 의사에 기초한다. 이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리와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는 표현이 함정이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국가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선지는 '개인의 자유·기본권 보장·권력 분립'이라는 자유주의 요소와 '국민 주권·국민 합의'라는 민주주의 요소로 나누어 판단한다. 국가나 집단을 개인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표현은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 개인의 자유 + 권력 분립 + 국민 주권이다.

NoteBase

문 2. 다음은 어떤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보기>

㉠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이 있다.

㉡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 다른 기본권이 그 자체가 목적인 것과는 달리 이 기본권은 수단적 권리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과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소극적·방어적인 자유권과 적극적·수단적인 청구권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구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헌법 제30조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한다.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인 반면, 청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다른 기본권이나 실체적 권리를 실현·구제하는 적극적·수단적 권리이다. 따라서 ㉠과 ㉡은 틀리고, ㉢과 ㉣은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과 ㉡은 모두 틀리다. ㉠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성'은 자유권의 성격이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의 구조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의 명예회복 조치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며, 무죄재판 등에 따른 형사보상·명예회복 제도와 구별된다.
틀린 표현: ㉠, ㉡
올바른 표현: ㉢, ㉣

② X
㉣은 옳지만 ㉠은 틀리다.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의 구제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하므로 적극적·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틀린 표현: ㉠, ㉣
올바른 표현: ㉢, ㉣

③ X
㉢은 옳지만 ㉡은 틀리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범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구하는 권리이지,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까지 함께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틀린 표현: ㉡, ㉢
올바른 표현: ㉢, ㉣

④ O
㉢과 ㉣은 모두 옳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실체적 권리를 구제하고,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오답 포인트

㉠의 '소극적·방어적'이라는 표현을 모든 기본권의 공통 성격으로 보면 틀리기 쉽다. 이는 자유권의 전형적 성격이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은 적극적·수단적 권리이다. 또한 ㉡은 범죄피해자구조와 형사보상·명예회복 제도를 혼동하게 만든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의 간섭 배제를 요구하면 자유권의 소극적·방어적 성격으로 판단하고, 국가에 구조·보상·재판 등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면 청구권의 적극적·수단적 성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에 구조를 요구하는 적극적·수단적 청구권'이다.

NoteBase

문 3. 다음 (가)~(다)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나)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보기>
㉠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 (나)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 (가)와 (다)의 원칙은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 근대 민법의 원칙이었던 (가), (나), (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모두 폐기되고 각각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과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를 수정·보완한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원칙이며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나)는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다)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현대 민법에서는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원칙들이 각각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상대의 원칙 등으로 수정·보완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이 틀리므로 '㉠, ㉤'은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의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가 틀린 표현이다. (가) 사적 자치의 원칙은 본래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구체화되며, 현대에는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② O — ㉤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무과실 책임이라는 예외가 인정되었다는 설명이고, ㉢은 사적 자치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경제적 강자에게 악용되어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므로 둘 다 옳다.
③ X — ㉣이 틀리므로 '㉤, ㉣'은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의 '모두 폐기되고 각각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었다'가 틀린 표현이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되고 수정·보완되었다.
④ X — ㉢은 옳지만 ㉣이 틀리므로 '㉢, ㉣'은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은 '모두 폐기되었다'가 아니라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 수정·보완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별개의 신·구 원칙처럼 제시한 함정이다. 계약 자유는 사적 자치가 계약 영역에서 나타난 모습이고, 현대적 수정 원칙은 계약 공정이다. 또한 ㉣의 '폐기·대체'라는 단정도 함정이며, 근대 민법의 원칙은 현대에 제한되고 수정·보완되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설명을 '근대의 원칙 → 현대의 수정 원칙'으로 대응시킨다. 사적 자치·계약 자유 → 계약 공정, 과실 책임 → 무과실 책임 인정, 소유권 절대 → 소유권 상대이며, 이러한 변화는 원칙의 전면 폐기가 아니라 수정·보완이다.

암기 포인트

근대는 계약 자유·과실 책임·소유권 절대, 현대의 보완은 계약 공정·무과실 책임·소유권 상대이다.

NoteBase

문 4. 다음 A와 B 유형의 국민 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크게 A와 B로 구분된다. A는 헌법상 제도화된 국민 투표로서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국민의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치권의 정당성 내지는 통치자의 신임 여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토 변경이나 병합 등의 특정한 정치적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다.

① A는 신임 투표제로, B는 국민 표결제로 부르기도 한다.

② B는 A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

③ 국론 분열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B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다.

④ B는 효과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각광받고 있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 투표의 두 유형인 국민 표결제와 신임 투표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투표의 대상이 국가의 중요 사항인지, 통치자의 정당성·신임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민 표결제(referendum)는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 사항을 국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신임 투표제(plebiscite)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통치권의 정당성이나 통치자에 대한 신임을 국민 투표의 형식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A는 헌법상 제도화된 국민 표결제이고, B는 헌법상 제도화되지 않은 신임 투표제이다. 현행 헌법상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 투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는 임의적 국민 투표이고,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둘 다 A에 해당하며, B는 통치자의 권력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와 B의 명칭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틀린 표현: ‘A는 신임 투표제, B는 국민 표결제’
올바른 표현: A는 국민 표결제이고, B는 신임 투표제이다.

② O
B는 통치자에 대한 신임을 국민 투표 형식으로 확인하므로, 국민의 찬성을 내세워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화된 중요 사항의 표결인 A보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③ X
B는 헌법상 필수 절차로 제도화된 국민 투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므로 필수 절차가 아니다.
틀린 표현: ‘B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다’
올바른 표현: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 투표는 A에 해당하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④ X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적 수단으로 평가되는 것은 주로 A와 같은 국민 표결제이다. B는 통치자의 신임과 권력 정당화에 이용될 위험 때문에 효과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각광받아 증가하는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 ‘B는 효과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각광받고 있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다’
올바른 표현: A와 같은 제도화된 국민 표결제가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 수단이며, B는 권력 정당화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국민 표결제와 신임 투표제의 명칭을 뒤바꾸었고, ③은 ‘할 수 있다’는 임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친다’는 의무 절차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헌법 개정안의 필수 국민 투표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임의적 국민 투표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표 대상이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 사항이면 국민 표결제, 통치자에 대한 신임이나 권력의 정당성 확인이면 신임 투표제로 판단한다. 법적 절차를 묻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와 ‘반드시 거쳐야 한다’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A는 안건을 표결하는 국민 표결제, B는 통치자를 신임하는 신임 투표제이다.

NoteBase

문 5.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 개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 대통령 국회 간선제 도입,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국회 구성
㉢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신설하여 대통령 간선제 시행
㉣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도입

① ㉠은 건국헌법으로 초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② ㉡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만을 가졌다.
③ ㉢으로 입법부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신대통령제가 구축되었다.
④ ㉣은 ㉡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별 핵심 내용과 정부 형태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을 각각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년 의원내각제 개헌, 1972년 유신헌법, 1987년 현행 헌법 개정과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대통령 간선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나 별도의 선거기관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파를 기반으로 구성된 내각이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부 형태이다.

핵심 구분

㉠은 건국헌법이 아니라 1954년 제2차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이다. ㉡은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은 1972년 제7차 개헌인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권한을 크게 강화하였다. ㉣은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1948년 건국헌법이 아니라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의 내용이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없애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근거가 되었다.
틀린 표현: '㉠은 건국헌법'
올바른 표현: '㉠은 1954년 제2차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

② O
㉡은 1960년 제3차 개헌의 내용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행정권은 내각이 담당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되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놓였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였다.

③ O
㉢은 1972년 유신헌법의 내용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입법부보다 대통령이 우위에 서는 신대통령제를 구축하였다.

④ O
㉣은 1987년 제9차 개헌의 내용이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한 대통령제이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히 결합하는 ㉡의 의원내각제보다 양 기관의 권력 분립이 뚜렷하다.

오답 포인트

㉠의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를 1948년 건국헌법의 내용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조항은 초대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둔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의 핵심 내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헌별 대표 표지를 먼저 연결한다.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는 1954년 사사오입 개헌, 의원내각제·양원제는 1960년 제3차 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유신헌법,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다.

암기 포인트

1954 초대 대통령 예외, 1960 내각제·양원제, 1972 통일주체국민회의, 1987 직선·5년 단임으로 연결한다.

NoteBase

문 6. 다음은 복수 정당제의 두 유형 ㉠, ㉡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정국 안정의 실현 가능성	낮음	높음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	높음	낮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낮음	높음

① ㉠은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난다.

② ㉠은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③ ㉡보다 ㉠에서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

④ ㉡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이 나타나는 국가에 비해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더 용이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표에 제시된 정국 안정성,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당제와 양당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찾는다.
2. 정국 안정성과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을 함께 비교한다.
3. 각 유형의 특징과 대표 국가를 선지에 적용한다.

핵심 근거

㉠은 다양한 의견의 반영 가능성이 높고 정국 안정성과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낮으므로 다당제이다. ㉡은 그 반대이므로 양당제이다. 다당제는 여러 정당이 경쟁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쉽지만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양당제는 한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기 쉬워 정국 안정성과 책임 정치에 유리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다당제이지만 다당제가 특정 정부 형태에서만 또는 주로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인 '주로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난다'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독일, 일본, 노르웨이에서는 여러 정당이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다당제가 나타나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X — 표에서 ㉠은 여러 정당이 정책 결정에 관여하여 책임 소재가 분산되기 쉬운 다당제이고, ㉡은 한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기 쉬운 양당제이다. 틀린 표현인 '㉠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양당제와 다당제는 모두 복수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므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정당의 수만으로 ㉡에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더 용이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에서 더 용이하다'는 '두 유형 모두에서 가능하며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이 양당제라는 점만 보고 정권 교체도 반드시 더 쉽다고 판단하는 것이 함정이다. 표가 직접 보여 주는 것은 정국 안정성, 의견 반영 가능성, 다수당 횡포 가능성의 상대적 차이이며, 정권 교체의 용이성까지 정당 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양한 의견 반영이 높고 정국 안정성이 낮으면 다당제, 다양한 의견 반영이 낮고 정국 안정성과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높으면 양당제로 판단한다. 그다음 다당제는 다양성과 타협, 양당제는 안정성과 책임 소재라는 기준으로 선지를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다당제는 다양성, 양당제는 안정성과 명확한 책임 소재로 연결한다.

NoteBase

문 7. 다음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보 혁명이 세계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 관점에서 본 정보 기술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구로 사용되는 권력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은 첨단 하드웨어의 보급이나 국가 전략 산업의 발달 정도로 이해되며, 국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 반면 B 관점에서 본 정보 기술은 세계 정치의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능하게 된 소통의 향상은 국제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상호 의존의 환경을 제공한다.

<보기>

㉠ A 관점에서는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퇴행으로 귀결된다.

㉡ B 관점에 의하면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 A 관점에 비해 B 관점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다.

㉣ A 관점과 B 관점 모두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보 기술과 국제 협력을 바라보는 현실주의 관점(A)과 자유주의 관점(B)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 관점은 현실주의이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국가 위의 중앙 권력이 없는 무정부 상태로 보고, 국가가 생존과 국가 이익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고 본다. 정보 기술도 국가 이익을 위한 권력 자원으로 이해한다.

B 관점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국가 간 상호 의존과 소통이 국제기구·국제법과 결합하면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이 틀렸다.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퇴행으로 귀결된다'는 설명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종속 이론의 관점이다. A 관점인 현실주의는 국가가 무정부 상태에서 생존과 국가 이익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고 본다.
② X — ㉠이 틀렸으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도 틀렸다.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고 국가 간 권력 경쟁을 강조하는 것은 A 관점이다. B 관점은 국제기구·국제법과 상호 의존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강조한다.
③ O — ㉡과 ㉢이 모두 옳다. B 관점은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한 평화적 갈등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 때문에 A 관점보다 국제기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④ X — ㉢은 옳지만 ㉣이 틀렸다. 'A 관점과 B 관점 모두'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와 권력 경쟁을 핵심 전제로 강조하는 것은 A 관점이다. B 관점은 상호 의존과 제도를 통한 국제 협력의 가능성을 중시한다.

오답 포인트

㉠의 선진국 발전과 후진국 퇴행이라는 표현을 현실주의의 국가 간 경쟁과 혼동하기 쉽다. 이는 종속 이론의 핵심 설명이다. 또한 ㉣의 '모두'가 함정이다. 이 문항에서는 무정부 상태를 강조하는 A와 국제기구·국제법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는 B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 이익·권력·무정부 상태가 중심이면 현실주의, 상호 의존·국제기구·국제법·협력 가능성이 중심이면 자유주의로 판단한다. 선진국의 발전이 후진국의 저발전을 낳는다는 설명은 종속 이론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현실주의는 권력과 국가 이익, 자유주의는 제도와 상호 의존, 종속 이론은 중심부의 발전과 주변부의 저발전이다.

NoteBase

문 8. <보기>에서 밑줄 친 ㉠과 ㉡의 현상에 대한 각각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제주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적인 폭설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설에 의한 ㉡대규모 비행기 결항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제주 공항 내 바닥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다.

① ㉠은 가치 함축적이고, ㉡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② ㉠은 몰가치적이고, ㉡은 개연성을 지닌다.
③ ㉠은 ㉡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
④ ㉠은 ㉡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 현상인 ㉠과 사회·문화 현상인 ㉡의 특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자연 현상: 인간의 가치 판단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몰가치적이며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인과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필연성과 보편성이 강하다.
㉡ 사회·문화 현상: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하여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치 함축적이며 당위 법칙의 영향을 받고, 개연성과 특수성이 강하여 우연과 예외가 비교적 많다.

선지별 해설

① X - ㉡에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이 '가치 함축적'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과 같은 자연 현상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므로 몰가치적이다. 올바르게는 '㉠은 몰가치적이고, ㉡은 당위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이다.
② O - ㉠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한 자연 현상이므로 몰가치적이다. ㉡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대응이 결합된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반드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개연성을 지닌다.
③ X - '㉠이 ㉡보다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는 비교가 반대이다. 자연 현상인 ㉠은 보편성이 강하고, 사회·문화 현상인 ㉡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져 특수성이 강하다. 올바르게는 '㉡은 ㉠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이다.
④ X - '㉠이 ㉡보다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는 비교가 반대이다. 자연 현상인 ㉠은 필연성이 강하고, 사회·문화 현상인 ㉡은 개연성이 강하여 우연과 예외가 더 많다. 올바르게는 '㉡은 ㉠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은 폭설을 계기로 발생했지만, 비행기 결항과 공항 노숙은 인간과 사회의 대응이 포함된 사회·문화 현상이다. 또한 ①은 ㉡에 관한 설명만 맞고 ㉠의 '가치 함축적'이라는 표현이 틀린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간의 의지·가치와 무관한 현상은 자연 현상으로 보아 몰가치성·존재 법칙·필연성·보편성을 연결한다.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대응이 개입한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으로 보아 가치 함축성·당위 법칙·개연성·특수성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 현상은 몰가치·존재·필연·보편,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당위·개연·특수이다.

NoteBase

문 9. 다음 밑줄 친 '제3의 길'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앤소니 기든스(Giddens, A.)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의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로, 시장에서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로 규정한다. 또한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적 보호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며,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연대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기>

㉠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을 높인다.

㉡ 영세민들에 대한 생계 보조금을 늘린다.

㉢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 노동 연계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수동적 소득 보장 중심 복지와 구분하고, 직업 능력과 노동 참여를 높이는 정책에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배제를 줄이려는 입장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처럼 급여를 사후적으로 확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교육·직업 훈련 등 인적 자본에 투자하여 취약 계층의 자립과 노동 참여를 돕는 적극적 복지를 강조한다. 따라서 ㉠ 누진세율 인상과 ㉡ 생계 보조금 증액보다 ㉢ 직업 훈련 지원과 ㉣ 노동 연계 복지가 더 부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 누진세율 인상과 ㉡ 생계 보조금 증액은 조세와 현금 이전을 통한 전통적 재분배에 가깝다. 제3의 길에 부합하도록 고치면 ㉢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 지원과 ㉣ 노동 연계 복지 제도의 시행이다.
② X — ㉣ 노동 연계 복지는 적절하지만, ㉠ 누진세율 인상은 제3의 길이 강조하는 노동 참여 능력의 향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을 ㉢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 지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 직업 훈련 지원은 적절하지만, ㉡ 생계 보조금 증액은 수동적 소득 보장 중심의 정책이다. ㉡을 ㉣ 노동 연계 복지 제도의 시행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은 직업 능력을 높여 자립 가능성을 키우고, ㉣은 복지를 노동 참여와 연계한다. 두 정책 모두 제3의 길이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와 사회 투자에 부합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문구만 보고 ㉠이나 ㉡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제3의 길은 단순한 세율·급여 인상보다 취업 능력과 노동 참여를 높이는 ㉢·㉣을 중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3의 길의 정책은 현금 급여의 단순 확대인지, 교육·훈련·고용 연계를 통해 자립 역량과 노동 참여를 높이는 사회 투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후자에 해당하면 제3의 길에 부합한다.

암기 포인트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적극적 복지, 사회 투자, 직업 훈련, 노동 연계이다.

NoteBase

문 10. 사회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으로 전환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혹은 사회적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복지 제도가 확충되었다.

② 상류층의 구매력을 진작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③ 급격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④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다이아몬드형에서 타원형으로의 변화가 중간 계층의 확대와 계층 간 격차의 완화를 뜻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상층과 하층보다 큰 구조이다. 타원형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보다 중층이 더욱 두터워지고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줄어든 구조로, 소득 재분배와 사회 보장 강화 등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복지 제도의 확충은 조세와 사회 보장 급여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여 하층의 비율을 줄이고 중간 계층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타원형 계층 구조로의 변화와 부합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상류층의 구매력을 진작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시행하였다'이다. 상류층 중심의 감세는 소득 재분배를 약화하고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중·하층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와 누진적 조세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였다고 해야 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급격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이다. 양극화는 중간 계층이 줄고 상층과 하층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타원형이 아니라 모래시계형에 가까워지는 변화이다. 올바르게는 양극화가 완화되고 중간 계층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해야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감소하였다'이다. 타원형으로의 변화는 중층 확대와 격차 완화에 부합하며, 이동 가능성 감소는 계층 구조의 폐쇄성이 커지는 현상이다. 올바르게는 계층 간 이동 기회가 확대되고 계층 구조의 개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양극화'는 타원형과 반대 방향의 변화이다. 중간 계층이 두터워지면 타원형에 가까워지고, 중간 계층이 붕괴하여 상층과 하층으로 갈라지면 모래시계형에 가까워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형의 이름보다 각 계층의 구성 비율을 먼저 판단한다. 중층 확대와 격차 완화는 타원형, 중층 축소와 양극화는 모래시계형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타원형은 중층 확대·복지 강화, 모래시계형은 중층 축소·양극화이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근대화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다. <보기>의 ㉠~㉣ 중 이 이론에 대해 옳은 설명의 개수는?

근대화라는 것은 기술 발전, 공업화, 민주주의, 개인주의의 확산을 가리킨다. 서구 사회가 이를 먼저 이루어냈으므로 근대화와 서구화가 동일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3 세계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경제 발전 모델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제도와 사고 방식도 배워야 한다.

<보기>

㉠ 로스토(Rostow, W.W.)의 경제 성장 단계론이 이에 속한다.

㉡ 서구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 근대화와 정치 발전의 관계를 직선적·긍정적 관계로 파악한다.

㉣ 세계의 모든 사회는 앞으로 근대화될 것으로 본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이 설명하는 근대화론의 성격을 파악하고, <보기>의 네 진술이 그 특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대화론은 전통 사회가 서구 선진 사회와 같은 근대 사회로 발전해 간다고 보는 이론이다. 발전을 전통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보편적·직선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서구의 경제·정치 제도와 가치관을 발전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보기 판단

㉠ O — 로스토의 경제 성장 단계론은 모든 사회가 전통사회에서 이륙 준비, 이륙, 성숙을 거쳐 고도 대중소비사회로 발전한다고 보므로 근대화론의 대표적 사례이다.

㉡ O — 서구의 발전 경로와 제도를 보편적 기준으로 삼으면 비서구 사회에 서구 제도를 이식하는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 O — 근대화론은 경제 성장과 사회의 근대화가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직선적·긍정적 관계를 전제한다.

㉣ O — 근대화론은 모든 사회가 궁극적으로 전통성을 벗어나 근대 사회로 이행한다고 보는 보편주의적·단선적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 ㉡, ㉢, ㉣의 4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1개’가 틀린 표현이다. 옳은 설명은 ㉠~㉣ 모두이므로 올바른 개수는 4개이다.
② X — ‘2개’가 틀린 표현이다. 옳은 설명은 ㉠~㉣ 모두이므로 올바른 개수는 4개이다.
③ X — ‘3개’가 틀린 표현이다. 옳은 설명은 ㉠~㉣ 모두이므로 올바른 개수는 4개이다.
④ O — 옳은 설명이 ㉠~㉣의 4개이므로 맞는 선택지이다.

오답 포인트

㉡은 근대화론 자체가 식민 정책이라는 뜻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발전 경로를 유일한 기준처럼 제시하기 때문에 식민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 표현을 근대화론의 특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개수를 잘못 세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에서 근대로의 단선적 발전’, ‘서구 사회를 발전 모델로 설정’,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의 긍정적 관계’,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근대화론의 특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단선적 발전·보편적 근대화이며, 대표 이론은 로스토의 경제 성장 단계론이다.

NoteBase

문 12.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화 변동은 발명이나 발견으로 인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인 내재적 변동과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에 전파되어 기존 문화가 전파된 문화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변동인 외재적 변동으로 구분된다.

② 문화 접변은 외재적 변동 중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문화 융합은 한 사회의 문화 요소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져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문화 지체는 문화 변동 과정에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가 다른 부조화 현상을 의미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화 변동의 원인과 문화 접변의 결과인 문화 병존·문화 융합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재적 변동은 발명이나 발견처럼 사회 내부의 요인으로 문화가 변하는 현상이고, 외재적 변동은 다른 사회의 문화가 전파되어 기존 문화와 상호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화 접변은 서로 다른 문화 체계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한쪽 또는 양쪽의 문화 체계에 변화가 생기는 현상이다.
문화 병존은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문화 융합은 두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양쪽의 성격을 지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문화 지체는 일반적으로 물질문화의 빠른 변화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가지 못해 부조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발명·발견에 따른 변화는 사회 내부에서 비롯된 내재적 변동이고, 다른 사회의 문화가 전파되어 기존 문화와 상호 작용하면서 생기는 변화는 외재적 변동이다.
② O — 문화 접변은 서로 다른 문화 체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문화 체계에 변화가 나타나는 외재적 변동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로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문화 융합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문화 병존이며, 문화 융합은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하여 두 문화의 성격을 지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현상이다.
④ O —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 차이로 생기는 부조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물질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제도·가치관 등의 비물질문화가 이를 뒤늦게 따라가면서 발생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외래 문화 요소를 받아들였다는 점만 보고 문화 융합으로 판단하게 한다. 그러나 '각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채 함께 존재'한다는 표현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융합이 아니라 문화 병존의 결정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변의 결과는 문화 요소의 정체성 유지 여부로 판단한다. 각 문화의 고유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병존, 두 문화가 결합해 새로운 문화가 생기면 융합, 한쪽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되어 정체성을 잃으면 동화이다.

암기 포인트

따로 함께 있으면 병존, 섞여 새것이 되면 융합, 한쪽이 사라지면 동화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A. (㉠)에서는 사회화를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규범, 행동 양식 등을 학습하면서 사회의 질서에 적응하고 통합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B. (㉡)은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반면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C. 뒤르켐(Durkheim, E.)은 (㉢)을(를) 사회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하는 경우나 여러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① ㉠: 갈등론적 관점, ㉡: 사회 명목론, ㉢: 피그말리온
② ㉠: 갈등론적 관점, ㉡: 사회 실재론, ㉢: 아노미
③ ㉠: 기능론적 관점, ㉡: 사회 명목론, ㉢: 아노미
④ ㉠: 기능론적 관점, ㉡: 사회 실재론, ㉢: 피그말리온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회화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 사회 명목론, 뒤르켐의 아노미를 각각의 핵심 설명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 기능론적 관점: 사회화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게 하여 사회 질서의 유지와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
㉡ 사회 명목론: 개인이 사회보다 우위에 있으며,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본다.
㉢ 아노미: 뒤르켐이 설명한 규범의 약화·부재 또는 상충으로 인한 무규범 상태이다.
피그말리온 효과: 타인의 기대가 실제 행동이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사회 명목론은 맞지만, ㉠의 '갈등론적 관점'과 ㉢의 '피그말리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은 기능론적 관점, ㉢은 아노미이다.
② X — ㉢의 아노미는 맞지만, ㉠의 '갈등론적 관점'과 ㉡의 '사회 실재론'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은 기능론적 관점, ㉡은 사회 명목론이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과 별개의 독립적 실체이며 개인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③ O — 질서에의 적응과 통합은 기능론적 관점, 개인의 우위와 사회의 비실체성은 사회 명목론, 규범의 약화·부재·상충은 아노미에 각각 해당한다.
④ X — ㉠의 기능론적 관점은 맞지만, ㉡의 '사회 실재론'과 ㉢의 '피그말리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은 사회 명목론, ㉢은 아노미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지배적 가치나 규범’이라는 표현만 보고 갈등론을 고르기 쉽지만, 문장의 결론이 ‘질서에 적응하고 통합’하는 기능이라는 점이 기능론의 결정적 단서이다. 또한 개인이 사회보다 우위라는 설명은 사회 실재론이 아니라 사회 명목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서·통합·안정’은 기능론, ‘개인 우위·사회는 독립적 실체가 아님’은 사회 명목론, ‘규범 약화·무규범’은 아노미로 연결한다. ‘타인의 기대가 실제 성취에 영향을 줌’은 피그말리온 효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질서와 통합 = 기능론, 개인 우위 = 사회 명목론, 규범의 공백 = 아노미이다.

NoteBase

문 14.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쌀은 정상재로 가정한다.)

①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② 쌀 가격이 상승하면 쌀의 수요는 감소한다.

③ 쌀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

④ 개인의 쌀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을 쌀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공급 곡선의 이동과 곡선 위의 이동을 구별하고, 시장 수요 곡선의 도출 원리를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수요는 각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수량들의 관계이며, 수요량은 특정 가격에서 구매하려는 수량이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위에서 수요량이 변하고, 소득과 같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에서도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이고, 기술 변화 등은 공급 곡선의 이동을 일으킨다. 시장 수요는 같은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을 합하여 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쌀은 정상재이므로 소득이 감소하면 쌀 수요가 줄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기술 발전은 생산비를 낮추거나 생산성을 높여 각 가격에서 공급 가능한 양을 늘리므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② X — 틀린 표현은 '쌀의 수요는 감소한다'이다. 쌀 자체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요 곡선 위에서 쌀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쌀 가격이 상승하면 쌀의 수요량은 감소한다'이다.
③ O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정(+)의 관계를 뜻하므로,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④ O — 시장 수요 곡선은 각 가격 수준에서 모든 개인의 수요량을 합산하여 얻으므로 개인 수요 곡선들을 수평으로 합한 곡선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일상적으로 '수요가 줄었다'고 표현하는 습관을 이용한 선지이다. 경제학에서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와 가격 이외 요인에 따른 수요 자체의 변화를 엄격히 구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화의 원인이 해당 재화의 가격이면 곡선 위의 이동인 수요량·공급량의 변화로 판단하고, 소득·기술·생산요소 가격 등 가격 이외의 요인이면 수요·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 가격 변화는 수요량·공급량의 변화, 그 밖의 조건 변화는 수요·공급의 변화이다. 시장 수요는 개인 수요의 수평합이다.

NoteBase

문 15. <보기>는 각 상품의 수요 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행 수준에서 가격(P)은 15이고, 수요량(Q)은 30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의 개수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보기>

㉠ A상품 수요 함수: $Q = 60 - 2P$

㉡ B상품 수요 함수: $Q = \frac{450}{P}$

㉢ C상품 수요 함수: $Q = 30$

㉣ D상품 수요 함수: $Q = 40 - \frac{2}{3}P$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점탄력성 공식으로 각 상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고, 그 값이 1보다 작은 상품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현재 가격은 $P = 15$, 수요량은 $Q = 30$이다.
구해야 할 값: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상품의 개수이다.
주의할 조건: 가격탄력성은 변화율의 크기를 비교하므로 절댓값으로 판단하며, 탄력성이 정확히 1인 경우는 비탄력적이지 않고 단위탄력적이다.

사용할 공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E_d = \left|\frac{dQ}{dP} \cdot \frac{P}{Q}\right|$
각 수요 함수가 가격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dQ/dP와 현재의 P/Q를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 $Q = 60 - 2P$: $dQ/dP = -2$이므로 $E_d = |-2 \times 15/30| = 1$이다. 단위탄력적이다.
㉡ $Q = 450/P$: $dQ/dP = -450/P^2$이고 $P = 15$에서 $dQ/dP = -2$이므로 $E_d = 1$이다. 단위탄력적이다.
㉢ $Q = 30$: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아 $dQ/dP = 0$, $E_d = 0$이다. 비탄력적이다.
㉣ $Q = 40 - \frac{2}{3}P$: $dQ/dP = -\frac{2}{3}$이므로 $E_d = |(-\frac{2}{3}) \times 15/30| = \frac{1}{3}$이다.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비탄력적인 상품은 ㉢과 ㉣, 모두 2개이다.

선지 판단

① X — 비탄력적인 상품은 1개가 아니라 ㉢과 ㉣의 2개이다. 틀린 표현 '1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② O — 비탄력적인 상품은 ㉢과 ㉣의 2개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X — ㉠과 ㉡은 탄력성이 각각 1이어서 비탄력적 상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3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 '3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④ X — 네 상품 모두가 비탄력적인 것이 아니라 ㉢과 ㉣만 비탄력적이다. 틀린 표현 '4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과 ㉡의 탄력성이 1이라는 점을 놓치고 이를 비탄력적이라고 분류하기 쉽다. 문제는 '1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므로 $E_d = 1$은 제외해야 한다. 또한 수요 함수의 기울기 크기만 비교하지 말고 현재점의 P/Q까지 곱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함수에 대해 dQ/dP를 구한 뒤 현재점의 P/Q를 곱하고 절댓값을 취한다. 그 결과를 $E_d < 1$, $E_d = 1$, $E_d > 1$로 나누어 각각 비탄력적, 단위탄력적, 탄력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점탄력성은 '기울기의 절댓값 × 가격 ÷ 수요량'이며, 1보다 작아야 비탄력적이다.

NoteBase

문 16.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노동, 쌀, 휴대폰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 형태로 수평선이나 수직선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다. 또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①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하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축소된다.

② 정부가 쌀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여 현행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쌀의 초과수요 해소를 위한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③ 정부가 휴대폰 제조업자의 이윤이 크다고 생각하여 휴대폰 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당 물품세 1만원을 부과할 경우, 1만원의 물품세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이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위의 모든 경우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정부 개입 전보다 축소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균형가격을 제한하는 가격 하한제·가격 상한제와 생산자에게 부과한 물품세가 거래량, 잉여, 조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 하한제는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가격 상한제는 가격이 일정 수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물품세의 실제 부담은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나뉜다. 거래량을 줄이는 유효한 가격규제와 물품세는 거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잉여를 사라지게 하여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유효한 가격 하한이다. 임금이 상승하고 기업의 노동수요량이 감소하므로 노동 수요자인 기업이 얻는 소비자 잉여는 축소된다.
② O —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 상한은 쌀의 수요량을 늘리고 공급량을 줄여 초과수요를 만든다. 공식 시장에서 부족한 쌀을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려는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③ X — 틀린 표현은 '1만원의 물품세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이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일반적인 기울기를 가지므로 세금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올바르게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가 받는 세후 가격은 내려가므로 제조업자의 이윤에도 영향을 미친다.
④ O — 균형에서 벗어난 가격 하한과 가격 상한은 거래량을 줄여 사중손실을 만들고, 물품세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 거래량을 줄인다. 따라서 세 경우 모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가 정부 개입 전보다 축소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경제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를 같다고 보게 만드는 함정이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생산자가 세액 전부를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아니며, 양쪽의 가격탄력성이 조세 부담의 분담을 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하한은 균형가격보다 높은지, 가격 상한은 균형가격보다 낮은지를 먼저 확인한다. 유효한 규제이면 거래량 감소와 사중손실을 판단한다. 물품세는 부과 대상을 보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하여 실제 부담의 귀착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효한 가격 하한은 초과공급, 유효한 가격 상한은 초과수요를 만들며, 조세 부담은 법적 납세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탄력적인 쪽에 더 크게 귀착된다.

NoteBase

문 17.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른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다음 중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금리 인하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낙관적으로 전환되었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①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증가한다.

②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

③ 가계는 저축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

④ 민간 소비와 투자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금리 인하가 환율, 저축·투자, 총수요, 물가에 미치는 연쇄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리 인하는 자금 조달 비용과 저축의 유인을 낮추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늘어 총수요와 생산이 증가하며, 국내 물가에는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또한 국내 금리 하락은 외국 자금의 유입을 줄이거나 유출을 늘려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수출 증가 요인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내 금리가 하락하면 국내 금융 자산의 상대적 수익률이 낮아져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할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은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가 요인이 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이다. 실제로는 금리 인하로 소비와 투자가 늘고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진다.
③ O — 예금 등 저축의 이자 수익이 감소하므로 가계는 저축을 줄일 유인이 생기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므로 기업은 투자를 늘릴 유인이 생긴다.
④ O — 금리 인하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확대되어 생산과 고용 등 국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오답 포인트

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을 낮춘다는 사실을 물가 하락과 연결하면 ②를 놓치기 쉽다. 금리 인하는 총수요를 확대하므로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리 인하에서 '이자율 하락 → 저축 감소·소비 및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생산 증가·물가 상승 압력 확대'의 순서로 판단한다. 대외 부문에서는 '국내 금융 자산의 상대적 수익률 하락 →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 → 수출 증가'의 경로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금리 인하는 소비·투자·총수요를 늘리고,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 중 국내 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국민 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은 GNP에 포함된다.
㉡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GDP는 증가하지만, GNP는 감소한다.
㉢ 외국과의 교역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폐쇄 경제에서는 GDP와 GNP가 같다.
㉣ GDP와 달리 GNP는 자국의 고용, 물가 등 경기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GDP와 생산 요소를 제공한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GNP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국내 생산 지표이다. GNP는 일정 기간 자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국민 생산 지표이다. 따라서 자국민이 해외에서 얻은 요소 소득은 GNP에 포함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요소 소득은 GDP에는 포함되지만 GNP에서는 제외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이 모두 옳다. 자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은 국민 기준인 GNP에 포함된다. 또한 외국과의 교역이나 생산 요소의 이동이 없는 폐쇄 경제에서는 국내 생산과 국민 생산이 일치하므로 GDP와 GNP가 같다.
② X - ㉣의 '경기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GNP도 자국민의 생산과 소득을 나타내므로 그 변화가 국내 소비와 투자 등을 거쳐 고용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 ㉢이다.
③ X - ㉡의 'GNP는 감소한다'가 틀렸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늘면 국내 생산인 GDP가 증가할 수 있지만, GNP는 GDP에서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국내 요소 소득을 빼고 자국민의 해외 요소 소득을 더해 구하므로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 ㉢이다.
④ X - ㉡과 ㉣이 모두 틀렸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가 GNP의 감소를 반드시 뜻하지 않으며, GNP도 자국민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통해 국내 고용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GDP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만 보고 GNP가 반대로 감소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GDP와 GNP의 차이는 증감 방향이 아니라 생산 장소와 생산 요소 소득의 귀속 주체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 장소가 국내이면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GDP에 넣고, 생산 주체가 자국민이면 생산 장소와 관계없이 GNP에 넣는다. 두 지표의 차이는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GDP는 장소가 국내, GNP는 생산 주체가 국민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 중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으로의 해외여행 또는 유학 등이 증가하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원/달러환율이 상승한다.
㉢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한다.
㉣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는 상승하지만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원/달러 환율의 상승·하락이 원화의 달러 구매 비용, 달러 수요, 수출 경쟁력, 국내 물가 및 외채 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달러 환율은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다. 환율 상승은 달러 가치 상승·원화 가치 하락을 뜻하므로 달러 구매에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고, 환율 하락은 달러 가치 하락·원화 가치 상승을 뜻하므로 달러 구매에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품의 원화 가격과 원화로 환산한 외채 상환 부담은 커진다. 환율이 하락하면 이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부적절하지만 ㉣은 적절하므로 부적절한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의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적어진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의 양은 많아진다. ㉣은 환율 상승 시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적절하다.
② O — ㉠과 ㉤이 모두 부적절하므로 정답이다. ㉠은 환율 상승 시 달러 구매에 필요한 원화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반대로 서술했다. ㉤의 '국내 물가는 상승하지만'도 틀렸으며,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낮아져 국내 물가의 하락 요인이 되고 외채 상환 부담도 감소한다.
③ X — ㉡과 ㉣은 모두 적절하므로 부적절한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증가하면 달러 수요가 늘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되며, 환율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틀린 조합을 고르려면 ㉡·㉣이 아니라 ㉠·㉤을 선택해야 한다.
④ X — ㉤은 부적절하지만 ㉡은 적절하므로 부적절한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의 달러 수요 증가와 환율 상승의 관계는 옳다. ㉤은 '국내 물가는 상승하지만'을 '국내 물가는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은 환율 상승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은 환율 하락의 효과 중 국내 물가만 반대로 제시한다. 특히 ㉤의 외채 상환 부담 감소는 옳더라도 앞부분이 틀리므로 문장 전체는 부적절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달러 환율을 '1달러의 원화 가격'으로 바꾸어 생각한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구매 비용·수입 물가·외채 상환 부담은 커지고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며, 환율이 내리면 각 효과는 반대가 된다.

암기 포인트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비싸짐·원화 약세, 환율 하락은 달러 싸짐·원화 강세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정부는 하천에 대해 산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먼저 근처 하천에서 깨끗한 물을 활용하여 유기농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 이 농가는 수 년 동안 품질 좋은 유기농 딸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어느 날 하천 상류에 폐타이어를 가공하는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이 공장은 폐타이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이를 정화할 경우 시설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정화 과정 없이 폐수를 하천에 내려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더 이상 유기농 딸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① 시장 실패 중 하나인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② 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폐수 처리 비용을 자신의 사적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양보다 과다 생산된다.

③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④ 전형적인'공유지의 비극'문제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폐타이어 가공업자가 하천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폐타이어 가공 공장은 정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수를 하천에 방류한다.
핵심 사실 2: 그 결과 하류 농가가 유기농 딸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공장이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은 오염 비용을 제3자인 농가가 부담한다.

핵심 개념

부정적 외부효과는 한 경제 주체의 생산이나 소비가 시장가격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므로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많아진다.

NoteBase

적용 기준

오염으로 생긴 외부비용이 생산자의 사적 비용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사례에서는 농가의 피해가 공장의 비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공장은 실제 사회적 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기준으로 생산하고, 폐타이어 가공량은 사회적 적정량보다 많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공장의 폐수 방류가 농가에 피해를 주므로 외부 경제가 아니라 외부 불경제, 즉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틀린 표현인 '외부 경제'는 '외부 불경제'로 고쳐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② O — 공장은 폐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그 비용을 사적 비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 결과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져 폐타이어 가공량이 사회적 적정량보다 과다해진다.
③ X —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가격에 외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하천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오염시키는 상황은 공유 자원의 남용 문제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해결 방향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반대이다. 해당 표현은 '하천의 과도한 사용과 오염을 줄이도록 이용을 제한하거나 외부비용을 부담시킨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외부 경제'와 ④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에 끌리기 쉽다. 농가에 발생한 손해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며, 정부 정책의 방향은 하천 이용과 오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비용을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서 제3자가 대가 없이 이익을 얻으면 긍정적 외부효과, 피해를 입으면 부정적 외부효과로 판단한다.
생산자가 외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적정량보다 많아진다.

암기 포인트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시장 생산량 > 사회적 적정량이다.

NoteBase